

갭투자로 수십채 산 뒤 보증금 '먹튀' 등 전세사기 348명 검거

전세사기 특별단속 2달새 348명 검거·34명 구속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허위보증·보험 편취 등

인천에서 갭투자로 주택 52채를 산 뒤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전세계약을 맺어 세입자 등 55명을 상대로 보증금 총 103억원을 등친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그는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위조해 6명을 상대로 담보대출금 10억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부산에선 금융기관 직원 등과 결탁해 지적장애인 등 대출명의자를 모집, 전세계약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9개 은행을 상대로 대출금 총 50억원을 뜯어낸 조직 48명이 붙잡히고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꾸리고 7월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63건·348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과 비교했을 때 검거 인원이 5.7배, 구속 인원은 1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국수본은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 7대 유형을 대상으로 내년 1월24

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거된 피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전세대출금을 뜯어낸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이 30명, 공인중개사법위반사범도 86명이 검거됐다.

피의자 신분별로 보면 ▲건축주 6명 ▲임대인 91명 ▲가짜대출금 편취에 가담한 가짜 임차인 105명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104명 등이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울산에서는 이미 세입자가 들어가 살고 있는 집에 허위전세계약을 은행에서 '청년전세자금' 명목으로 7억원을 대출 받은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10

명은 구속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의를 빌려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올려 임대·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전세대출로 15억원을 타낸 28명이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현재 경찰은 전국적으로 1410명을 상대로 전세사기 사건 총 518건을 내사·수사 중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금액이 과다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주요사건 34건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등 총 1만3961건에 대해 수사 의뢰 요청 및 자료 이첩을 받아 이 가운데 6113건, 23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 외에 자료 7848건에 대해선 분석을 진행

하며 추가 내사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부산의 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4억5000만원을 동결하는 기소 전 추정보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기도 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해 국가의 몰수·추징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다양한 법리검토 끝에 사문서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추징보전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국수본은 전했다. 자금을 동결해놓고 추후에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전세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함으로써 범행 및 재범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례로 전국 확대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코스모스 산책 나선 시민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 26일 전북 전주시 자연생태체험 학습원을 찾은 시민들이 만개한 코스모스를 바라보며 산책을 즐기고 있다.

실종 여중생 신고 안 하고 두 달 넘게 집에 재운 20대 입건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 "처지가 딱해 재워줬을 뿐"

광주에서 가출한 여중생에게 두 달 넘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지내면서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실종 아동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광주 모 중학교 학생 B(14)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바일 게임 메신저에서 만난 B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이 사는 대전에 올 것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B양의 처지가 딱해 집에서 재워줬을 뿐이다. 협박이나 감금 등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B양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30분께 학교에 휴대전화·가방 등을 버려둔 채 대전행 고속버스를 탔다.

B양은 대전버스터미널 도착해 택시에 탑승한 뒤 두 달 넘게 행방이 묘연했다.

부모의 미귀가 신고를 받은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양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전자 범의학 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대전 지역 한 식당을 중심으로 잠복·탐문 수사를 벌여 B양을 발견했다.

B양은 현재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이슬기자

흥기난동에서 방화까지...병원 내 폭행 5년간 9623건

응급 응급실 흥기난동, 부산대병원 방화 등 올해 들어 응급실 내 폭력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사건이 1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이 발생했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보호자 및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은 폭행 7037건(73.1%)이 가장 많았고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가 그 뒤를 이었다.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의 특성을 반영해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을 예방하고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